

종합토론

21세기 평화의 지향점

참가자: 학술회의 제1회의, 제2회의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

사회자: 문정인(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정인 : 제1회의와 제2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지속적인 평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빈곤으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은 폭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시장에서 평화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기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제체제에서 평화의 위협요인으로 단극화 요인도 언급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극체제 보다 단극체제가 더 낫다고 합니다. 냉전이 종식이 되고 민족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테러의 공격도 더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일리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행위자가 더 많다는 것은 체제가 불안해질 요인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긴장에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긴장이 유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런 추세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회의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이슈들이 폭넓게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토론자분들도 여러 가지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전체 진행 사

회를 맡게 되었는데 함께 평화에 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화와 관련하여 국가 경제도 많이 언급해주셨는데, 지배 구조와 함께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추가 할 것이 있으시면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빌리테브스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흥경제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이나 기업이 활동할 때 일단 기계 등을 설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제정해서 폐수도 재순환을 시키거나 폐기물을 어느 곳에 버리라고 할 것입니다. 원래 기능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투자의 서클로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계를 투자를 할 때 보통 10년 내지 15년 정도 예상합니다. 만일에 어떤 기계가 어떤 폐기물을 덜 생산해낸다고 폐수를 덜 만들어낸다고 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종량제와 같은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인센티브를 인식하고 조기 투자를 함으로써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지금 현재로는 나름대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미 초기부터 다음 단계까지 2년 내지 3년 정도 기다렸다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리 산출하는 것입니다.

문정인: 소비에 대한 것은 미리 사전에 계획하자는 소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 정부의 지배구조가 될 것입니다. 소재라든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신흥경제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서 이것은 세계화한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윤이숙: 지금까지 아직 지역적인 합의라든가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순환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현재로는 순환경제는 국가차원에서,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개도국에서 순환경제라는 것은 단순히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 한다든가, 가정 폐기물을 재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그냥 시장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순환경제는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쓰레기, 폐기물 같은 것을 재활용 하는데, 일부 정부에서 법규를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의 법규가 먼저 마련되면 기업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소비자들도 그런 것을 채택하게 될 것이고, 지역적인 발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화학폐기물, 폐지, 폐고철 등에서 이러한 것을 점진적인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계속 포함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벌써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세대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테프스키: 사실 많은 여러 정책을 우리 교과서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절차에 있어서 여러 국가들이 여러 자원에 대한 접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A라는 나라에서는 B라는 자원이 부족하지만, B라는 나라에서는 또 다른 것이 부족할 수 있

습니다. 어쨌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나라에 맞춰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엇을 먼저 재활용해야 할 것인지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능적인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계적 차원에서 협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차원에서 지역적인 노력이 있다고 윤이숙 교수님께서도 오전 회의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수출을 한 제품이 재활용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그 재활용 가능하다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개도국은 이러한 제품을 선진국에서 수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개도국에서는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과학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수입하는 제품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나름대로의 지혜를 모아 이러한 개도국에 뭔가를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산업 개발 프로젝트에만 치중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환경을 위한 곳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국가에서 특정 자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세계은행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방향을 조금 더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세계은행이 이런 자원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다면 지역 내에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가 상당히 좋은 예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재정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개도국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문정인: 중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아칭궈: 중국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선전입니다. 일단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야 됩니다. 일종의 세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나 관리차원에서 보면 중국 사회는 정부에서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라기보다 정부에 의해서 많이 지배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정부에서는 기술을 조금 조정해서 공무원 승진에서 생태적인 보호라든가 환경에 대한 것도 같이 감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공무원의 승진 기준을 조금 바꾸게 된다면 본인이 자연히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여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과 더불어서 법적인 체제도 도입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제도도 같이 늘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환경오염의 피해자, 희생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욱 드높여 동참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행태를 좀 더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일한 행위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1차적인 그러한 접근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이러

한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결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정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환경 이슈가 평화와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의 고민에 대처를 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순환경제라는 아이디어는 이것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환경제 그리고 지속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국가차원, 지역차원 및 범세계적인 차원 뿐 아니라 개발 기업, 개인 차원에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의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 사회,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을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마스 쿤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자면 이제는 어떤 지배적인 사회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체계, 규범, 가치관, 우리가 행동하고 소비하는 그런 습성, 살아가는 방식 등등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빈곤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크라바르티 교수님, 인도에서 빈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도 밖에서 특히나 제3세계국가에 있어서 빈곤을 퇴치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1년에 제가 노벨평화상 관련한 어떤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존 센 교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빈곤이 불안정성을 자극하고 또 평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센 교수님께서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벵골에서 1943년

당시 굉장히 가뭄이 심했고, 사람들이 많이 굶었지만 아무런 참극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빈곤 자체는 반드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셴 교수께서 말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빈곤을 퇴치할 수 있을 것인지? 인도 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 지역차원,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차크라바르티: 다른 발표자분들께서 해당 주제 부분을 수년 동안 연구하신 전문가 분들입니다. 저는 학자이지만 저의 접근은 사회운동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중국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만 이 빈곤이라는 이슈는 NGO쪽에서 많이 다뤄왔던 단골 이슈이고 사회운동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부패를 낮춰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빈곤을 퇴치하는 프로그램들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제 1의 요인은 관료들의 부패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가들, 관료들이 부패를 보이면서 빈곤 퇴치를 저해하고 있는데, 솔직히 어떤 해법이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이 그룹은 또 하나의 관료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하자면 어떤 중립적인 감시뿐만 아니라 외부단체에 의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단위 구역별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빈곤한 지역부터 선별을 해서 실험적 차원에서 먼저 해보고 성공을 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 단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구를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더 많은 말씀을 나중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어

쨌든 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빈곤에도 불구하고 인도 자체는 불안정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제 연구 논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국가로 80% 이상의 국민들이 힌두교를 믿습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람들은 자신이 만약에 빈곤하다면 전생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따라서 현생에서 잘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도문화는 어떻게 보면 빈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국 같은 경우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소외층을 이루고 있어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철역에서 노숙을 한다던가 하는데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 없는 이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서 살고 있지만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빈곤이 주요 갈등요인인 것은 맞지만 폭동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별도 심하고 억압도 심하고 빈곤도 매우 심함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폭력사태가 앞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도인들은 애초에 좀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내일은 더 좋겠지 라고 느긋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인도의 문화 전통도 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뭔가 행동을 취했을 때 정말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교육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문맹률을 깨뜨리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 전에는 행동이 없었습니다만 점점 더 이런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

곤 퇴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제 글을 읽을 수 있게끔 문맹을 타파하는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정인: 그런데 빈곤을 받아들이는 그 문화, 그것이 좋다 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차크라바티: 그렇죠. 설명을 해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인식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더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과거로부터 크게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혁명을 통해서 과거 전통들을 거스르고 현대화를 하고 있지만 인도는 단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힘듭니다.

문정인: 중국은 정말 과거로부터 단절을 해서 다시 탄생한 것이 맞습니까?

지아칭궈: 그런 움직임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이정민: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인도 그리고 중국에 관해 발표한 분들, 또 다른 분들에게도 질문이 되겠습니다. 문 교수님, 안정성, 개발 이런 주제가 제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만 고민은 인도와 중국이 계속해서 성공을 하고, 사회 성장을 하려면 전체 파이가 일단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나누어야 할 파이가 커야 됩니다. 경제성장률이 10%, 12%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데, 어떠한 인도 지도자, 중국 지도자도 경제성장률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기 과열 뿐

만 아니라 환경 생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이 저해된다고 말할 리도 없습니다. 그 피해 그 타격은 누가 다 고스란히 앓게 되는 것입니까? 선진국들은 이미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개발하지 말라고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개발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문제, 단절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이번 국제회의 뿐만 아니라 개발과 관련되는 모든 포럼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차크라바르티: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진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성장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환경은 나중에 생각을 하자는 측이 있다면, 반대측은 이렇게 급속한 경제성장을 했을 때 어떤 환경적인 문제, 기타 다른 파급효과를 갖고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문제를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습니다. 인도에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성장 고속개발보다는 좀 천천히 가야된다고 주장하는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도학자들은 후자에 속하는 편입니다.

문정인: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정부협정과 비슷한 것 같고, 기업 쪽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용민 교수님 어떠십니까?

김용민: 예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정치체제

의 비교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 빈곤과 불안정성 혹은 평화와의 관계는 선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선형일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는 빈곤해서 반드시 폭력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고속경제성장과정에서 폭력의 가능성은 분명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커가 말한 이론을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인도 모두 이런 빠른 산업화를 이루고 있는데, 빠른 산업화가 폭력으로 사회 불안정성을 늘리는 요소 중의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빈곤의 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의 과거 경험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절대 빈곤상태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치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보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들 국가를 보면 굉장히 강한 정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하나의 신화가 있는데,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NGO라든가, 국제 NGO들에 시민사회가 의존하고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NGO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정부에 대한 신념을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으로 정부가 맡은 책임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가장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실패한 국가, 실패한 정부라면, 빈곤을 퇴치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빈곤을 퇴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효과적인 정부가 있다면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빈곤퇴치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어떤 현인들이 말을 하건데 우선순위를 둘 때 빈곤층들에게 어떤 소비재를 제시해 주기보다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자체를 키워주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빈곤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문정인: 빈곤과 관련해서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해 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빈곤이 보편적인 심각한 이슈이고, 인권, 인격에 대한 큰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곤을 줄이고 퇴치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의식주의 기본권, 교육권만큼은 모든 이들에게 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크라바르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교육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맹률을 퇴치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생기고, 어떤 자기 만족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정민 교수님께서 말씀했듯이 경제성장이 빈곤을 퇴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중국 같은 경우에 연 10%이상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빈곤층의 수가 굉장히 많고, 중국과 인도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이정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차원, 국가차원, 국제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빈곤을 퇴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빈곤은 운명이 아니라 빈곤에 익숙해져있는 문화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국가에 있어서는 빈곤을 그냥 자신의 운명으로 체념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것을 그냥 당연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념, 심리적인 요인들을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꽤 것이냐?, 이것 또한 빈곤을 줄이고 결국에는 퇴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니시가와 교수님의 논문을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시가와: 사실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순환경제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몇 가지 코멘트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와 환경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해 중국서부지역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접근방법 모두 지역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새로 심은 나무라든가 그런 식목사업들을 같이 시행을 했던 것인데, 지역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더 참여를 하면 지속성이 더 가능하기에 지역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 제주도를 방문했었습니다. 사실 제주도가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데, 30%이상 지역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보면 제주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사람들

이 이야기하기를 77%가 여기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방문을 했었는데, 어떤 것을 해안부분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던 것인데, 지역사람들이 정부가 시도하는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대형 개발계획들을 하면은 환경이 파괴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지역자치권이 중요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은 폐기물이 나오지만 어디에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것을 보내자고 - 폐휴지, 폐철 같은 것-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에 보내자고 했지만 그쪽에 거주한 사람들은 그 안을 거절했습니다. 앞으로 15년 아니면 2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폐기물들을 어디에 버릴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핵폐기물, 산업폐기물 같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공간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 보면 지역 지자체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9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법안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더욱 더 발전할 것이고 지역경제가 더욱 더 증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빈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곤이라는 것이 절대 빈곤이냐 아니면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 젊은 사람 중에서 전혀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리포트를 보고 했었는데 약 2백만 정도 사람이 여기 해당된다고 합니다. 전체 노동인구가 6천만명인데, 그 중에서 2백만이 이미 고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인이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갖출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여성의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20년 정도 전의 여성의 지위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약 15만 정도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용의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득과 기회의 격차가 남성과 여성 간에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 가보면 NGO도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님께서도 저희에게 축사를 해주셨는데, 사회가 우리에게 투자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역경제도 증진시킨다고 언급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문정인: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니시가와: 일본에 비영리 재단 같은 경우 낮은 레벨에서 60% 정도가 여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들은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는 특히 관리자 레벨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은 어느 정도 일본 사회에서 소외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기회 면에서도 많이 제약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경제를 더욱 더 증진시키고 비즈니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도 물론 창출해야겠지만 이와 동시에 일본 경제 내에서 여성들의 빈곤상태도 신경을 써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정인: 감사합니다. 니시가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과 빈곤에 있어서 지역차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하셨는데, 인권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민: 제가 니시가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차원의 자치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 같은 경우는 NGO 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자체 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제 자체 내에서도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간의 갈등도 존재하는데, 물론 지방정부에 더 많은 지지를 해줘야 하긴 합니다만 좀 더 총체적인 관점에서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자원을 배분하는데 지방정부를 더 많이 선호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정인: 인권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인권부분에 대해 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인권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간의 차이는 우리가 좀 뚜렷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슬로우의 법칙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 자기실현 등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문제도 같이 우리가 다루어 봐야 될 것인데, 하나의 평화라는 아젠다 하에서 이것을 다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전세계인들의 주목을 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아칭귀 박사의 발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

떤 제안이 있는지요.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태효 교수님께서도 아직 명백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분명히 미국과 중국 간의 협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초강대국의 책임은 어떤 것인지 중국이 지금 현재 국력 면에서 일본을 현재 앞서고 있고, 중국이 거의 미국과 대등하게 지역 파워에서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가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아칭궈: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사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좀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극주의적 세계화의 논리에 의해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루는 것이 점차 더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중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은 반드시 당면하고 있는 도전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단극화 성격에 관해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미국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협력의 기반과 명분들이 있고, 협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공동의 신뢰가 구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의 폭도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위험 요소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극화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도 인식을 할 것이고, 중국과의 갈등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진정한 도전이라고 한다면 중국이라는 국가는 과거에 부상했던

국가와는 많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국은 즉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서로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은 사실 미국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미국의 번영도 중국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는 서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결국은 양국이 갈등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미국이 어떤 대결 상황으로 중국을 몰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기준과 양국이 수용 가능한 가치도 함께 공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이슈를 함께 다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정인: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제시하셨는데, 과연 중국과 미국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가치의 통합이라고 할 그런 융합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김태효: 지난 30년 개혁과 개방을 중국 정부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계속 변화해 왔고 여러 단계의 가치도 도입을 했습니다. 시장 원리도 도입을 했으며 법치제도, 인권, 민주주의 등과 같은 것도 도입을 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시행하려고 하고 가치를 실행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물론 중국정부에서는 그대로 서구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물론

몇 가지 그 조건이 있긴 합니다.

지아칭궈 교수님의 논조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중국이 나름대로 중국에게나 아니면 전 세계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사실 서구의 의회 제도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를 건들지 마라, 우리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권문제도 우리 문제이며 이것은 국내의 현대화 과정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전 세계적인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국내폭력 문제에 대해서 웨스트팔리안 조약이 지금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미국판 자유이건 시장이건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객관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중국은 현재 상당히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권 문제나 교토 의정서 이후에 이산화탄소 배출 - 2012년부터 이것이 본격적으로 발효가 될 것입니다-에서 중국이 과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동북아 지역을 넘어서서 전 세계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과연 뭔가를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칭궈: 김태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이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관련해 중국학자들의 이론을 공부해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습니다. 중국은 EU 국가들을 설득하려고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해명을 하려고해선 안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핵 프로그램을 현대화하고 있는데 -핵무기가 장착된 잠수함도 만들고 있고- 중국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 관련 시설을 보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석유 매립지 등을 사들이는 등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아프리카 등에서 적극적으로 석유 등을 매입하면서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단순하게 우린 이렇다고 해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훨씬 더 많은 책임을 몸소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는 북한의 핵무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북한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의 핵심은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정인: 김태효 교수님은 지아칭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효: 중국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권력의 독점 그리고 권력의 현대화, 중국공산당 구조 내에서의 권력의 이양 등 이런 세 가지들이 연상됩니다. 이것이 중국 정치권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이슈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중국이 오늘날 어떤 일을 하던 이것은 중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7개의 EU 국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내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 정책 방향 하나 하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

라서 중국의 엘리트층들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대 중국, 서양 가치관 대 아시아 가치관 등의 대결구조가 아닙니다. 중국이 워낙 급성장을 빠른 시간 내에 했기 때문에, 또 그 영향력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중국 내국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중국지도부들은 이제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꺾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지도부들은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시가와: 제가 시민사회 같은 경우 아직 역할이 작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평화와 관련해서 그 역할이 작다고 했는데, 사실 아시아권에서 두 국가에서는 시민사회의 힘이 막강한 국가도 있습니다. 대만과 한국이 그런 사례인데 NGO들의 위력이 강한 국가들입니다. 시민사회 비중이 지금은 약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평화를 구축하거나 인권을 지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에서의 평화를 말씀드리겠는데, 대만 같은 경우 2월 28일 있었던 그 사건 이후로 대만은 2월 28일 기념관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정부가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평화자원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3일의 대량학살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 제주도에서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원자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만 이 원자탄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시다만 점점 더 이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관련된 법제들이 도입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를 위한 폭넓은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만 오키나와 그리고 제주도의 평화를 위한 삼각 구도가 형성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정인: 감사드립니다. 정치 역학을 보면 세계정세가 계속해서 변화를 할 것입니다. 특히 양극, 다극화와 세계화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논리적인 세계화 같은 경우 부정적인 현상들도 있지만 세계화로 인해서 협력이 강화되는 면도 있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역학이 지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가치에 대해서 다 정의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부 가치들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점점 더 법치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 인권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와 속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방향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인데, 중국이 과연 책임 있는 국제 리더로 부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이 과연 국제 규범과 국제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절차들을 다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일리스 같은 경우 이해관계자(stakeholder)로서 중국이 앞으로 새로운 21세기 세계질서를 편성하는 주역으로 얼마나 제몫을 할 것인가라는 우려를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이 맡은 강국으로서의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룡 교수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룡: 대부분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론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테러의 구조적 원인을 조금 놓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 테러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테러를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반테러를 위해

서 국제조직을 결성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근본 원인을 파헤쳐야 됩니다. 특히 이슬람권의 테러 등에 있어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정민 교수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테러의 확산은 마침 인종, 종교 간의 갈등과 때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9.11이라는 것은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죠. 이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역차원, 국가차원, 또 세계적 테러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가 9.11을 통해 인식을 갖게 되었지만 사실은 20세기 말부터 계속해서 이런 갈등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임용순: 환경, 빈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지만 이것들도 근본 원인 중 일부일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나가는 의미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지만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너무 약했다거나 아니면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적 테러의 큰 원인은 국가 간의 전쟁이라기보다 국내의 내전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전이 국가 간 갈등보다 5대 1 비중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내전이었던 것이 점점 더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비화되고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러, 인권유린 그리고 대량살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강대국 간의 갈등보다 국가 내부적인 내전 혹은 내부적인 갈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못했을 때 마약매매, 인신매매 등등 국내 상황이 불안전성을 많이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에서 빠진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수동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테러라는 것은 수동적이라기보다는 반응적 전략이라고 저는 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평화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테러의 원인을 찾는데 불평등, 인권유린, 빈곤 등의 아주 깊은 원인이라기보다 내전이라든가, 국가역할의 미미 등등에 관심을 가져 좀 더 표면에 가까운 그런 원인부터 규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효: 임 교수님은 테러 부분에 9.11이 터지기 전부터 전문가이셨습니다. 패널 토론에서 세 가지를 다룬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이 하나였고, 또 하나가 대량살상무기였는데, 별도의 이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동시에 같이 움직이고 있기도 합니다. 수년전 저와 굉장히 유명한 레널 채 칭 교수님이 같이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테러의 패턴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연구를 해 보았더니 무기들이 늘어남에 따라 테러도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찰스턴 출판사에서 1982년에 출판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가설이 맞았다면 군축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정민 교수님께서 아주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기를 냉전 이후 오히려 테러가 더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테러는 민주국가에서만 존재를 하고 어떤 효율적인 독재정치에서만 존재를 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완전 독재정치라면 테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분의 이론과 이정민 교수님의 이론이 조금 수렴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고민은 점점 많은 민주국가들이 -브루스 리셀이 아주 한참 전에 민주국가가 됴으로서 갈등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 반대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쉬운 일 중의 하나가 어떻게 이

런 위험한 무기들부터 줄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주요 국가들 간에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강대국들이 이러한 최첨단 무기들을 생산하는 그런 당사국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최첨단 무기들이 테러집단의 손에 넘어간다면 제임스 본드의 영화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인간이 상상한 대로 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하나의 발걸음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협력을 늘릴 것인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위험한 무기수부터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 점진적으로 작은 부분이라도-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환경이라든가 빈곤이란 이슈는 훨씬 더 힘든 이슈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대처하는데 항상 고심했었고 힘들어했습니다. 중국과 미국과 같은 주요 강대국들의 역할은 대량살상무기의 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정인: 지금까지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테러는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고 국제 테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주권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요소로서 부상을 하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까요? 뭔가 구조적인 그런 근본 원인부터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 빈곤, 인종, 또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관습, 혹은 종교적 정체성도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써 국제테러가 더 심화되는 현상이 있는데, 국제테러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화학적 물리적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국제적 협조도 강요를 해서 국제테러

에 대처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좀 더 구속력 있는 그러한 체제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문정인: 김영호 교수께서는 군축보다는 비핵이 맞다고 하셨는데, 좀 살을 붙여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영호: 그렇게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계의 전문가가 계신데 햇볕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어쭙잖지만 이제는 태양과 더불어 바람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저 교수님께서 만약 이 자리게 계셨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엘저 교수님께서서는 구조주의를 굉장히 강력하게 믿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조적 원인의 중요성을 테러문제에서도 강조를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받은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법이나 2번째 회의의 해법들은 모두 근본 원인으로 수렴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평화의 실질부터 들여다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안보를 중요시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평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근본을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리즘의 확산에 대처하는 어떠한 행동, 대량살상무기 회의, 그리고 테러, 불량국가에 대처하는 회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무력으로 이것들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보다 많은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권, 차별, 형평성 있는 경제발전, 생태계의 균형 등의 이슈들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핵 확산방지에서 국제적인 협력도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우: 둘 다 필요합니다. 핵확산 방지와 핵확산 억제 둘 다 필요합니다. 핵확산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네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인 교수님이 요약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핵 비확산에 힘을 주려해야 됩니다. 이미 네 가지의 주요 이슈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핵 비보유 국가들도 모두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유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보시스템을 더 강화시켜야 될 것이고, 군사력의 사용을 절제해야 됩니다. 군사 활동을 많이 할 경우 핵무기가 더 확산될 수 있는 많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핵 보유국, 비보유국들은 100% 형평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패권안정이론을 제거 완전히 꺾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수직적인 위계가 안정성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보유 국가들은 자신들의 100% 형평성을 요구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우려 대상인 미사일은 물론이고 생화학 무기 쪽으로도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어떤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같은 대표적인 미사일 확산 국가들이 있고, 북한도 미사일 확산 국가이고, 한때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외에도 잠재적인 확산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모종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어떤 정치시스템의 변환으로부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 만약 정권이 또는 정치가 갑자기 어떤 전환기를 맞게 되면 그 핵무기 시스템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교체 혹은 정치의 변환 시기에 핵무기,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정인: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다보면 8시간도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의 확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확산체제의 전문적 도입이고 두 번째는 핵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핵확산 억지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체계적인 핵확산 억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중함과 현명함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다자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국내의 어떤 역학관계에도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 확산과 관련해서 국내 여건들도 큰 요소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제사회 차원에서 국내 상황을 막무가내로 강제한다면 WMD를 조절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엘저 교수님은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지금 85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명한 연사분이시고 꿈이 많으신 분입니다. 좋은 꿈, 좋은 비전을 제시해 주신 분이시고 협력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김영호 교수님께서도 엘저 교수님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엘저 교수님은 휴머니스트이십니다. 그래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조하셨고, 또 지역차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니시가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역차원의 협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거미줄처럼 지역, 국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평화를 더욱 더 굳건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